한국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내수 총력에도 OECD 최하위권

4분기 GDP 전 분기 대비 -0.3%
OECD 17개 발표국 중 16위
3분기 1.3% 급등 '기저효과'
역성장 국가 韓 포함 3곳뿐

프랑스 파리 소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청사 내부. /OECD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기록하며 주요국 비교에서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직전분기(3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로 크게 뛴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으로는 1일 기준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3% 줄었다. 지난해 1분기의 -0.2% 이후 3개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

OECD 회원국 38곳 중 이날까지 총 17개국이 4분기 수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16위에 처져 있다. 17곳 가운데 역성장을 보인 곳은 한국 포함 3곳뿐이다.

상위권에는 리투아니아(+1.7%), 스페인(+0.8%), 포르투갈(+0.8%), 핀란드(+0.6%), 네덜란드(+0.5%), 체코(+0.5%) 등이 올라 있다. 유로존국가 평균은 +0.3%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수진작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그친 배경으로는 3분기 GDP가 1.3%(직전 2분기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꼽힌다. 이에 정부와 각 연구기관은 소비·투자의 지속 회복세 여부 관련한 판단을 대체로 유보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1분기 수치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4분기를 합친 연간 성장률 순위는 나쁘지 않다. 한국(+1.0%)은 해당 17개국 중 벨기에와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그 위로는 아일랜드(+12.6%)와 리투아니아(+2.8%), 스페인(+2.8%), 체코(+2.5%), 포르투갈(+1.9%), 네덜란드(+1.8%), 스웨덴(+1.7%), 캐나다(+1.3%)가 자리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0.9%)와 이탈리아(+0.5%), 독일(+0.2%) 등은 1% 미만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이래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계엄·탄핵에 더해 백악관발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도 1% 선을 지켜 낸 것은 고무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경제규모 세계 10위 캐나다와 12위 스페인의 작년 GDP는 각각 1.3%, 2.8% 늘어났다. 18위 네덜란드 GDP 증가율도 1.8%에 달한 반면, 15위 한국은 이들 3개국에 못 미쳤다. 또 16위 튀르키예를 비롯해 17위 인도네시아, 19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추격도 거세다.

정부과 국내외 기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30일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종전의 2.1%에서 1.9%로 낮췄다. 국내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동력 저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대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0%를 제시하는 등 지난해 1.0%보다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30인 미만 사업장에 HR플랫폼 도입비 지원

고용부, 근로계약 등 '원스톱' 관리

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R(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연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이다.

해당 HR 플랫폼을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거나, 2025년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이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다. 노동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2025년 11월 1~15일, 475개소 참여)에 따르면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노사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해수부, 전통시장·마트 등 집중

점검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점검 모습.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조사공무원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전통시장·마트 등의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비알코리아 '사전동의 없이 판촉 강행' 적발

공정위, 과징금 3.18억 부과
2022년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가맹점주 결정권 보호 의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일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판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브랜드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에도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이 규정한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알코리아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와 가맹점주 대상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한수원,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 착수

대형원전 2기·SMR 1기 대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에 착수했다. 대상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공모 절차와 일정,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공모문을 지난 30일 한수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오는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수원은 신청 부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보부지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행정 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경북 울진과 영덕 등 기존에 거론됐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